

# 여의도로 옮긴 검찰개혁 촛불...“이젠 국회가 응답하라”

## ■조국 사퇴 후 첫 주말집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과 광주에서 다시 열렸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도 진행됐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개국본은 최근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주도해 온 단체다. 이들은 지난 12일을 끝으로 촛불 문화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나 조 전 장관이 14일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사퇴하자 국회 앞으로 옮겨 문화제를 계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응답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문화제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정지권에 촉구했다. 문화제에 앞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 애쓴 공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천만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조 전 장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개국본 측은 당초 3만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복유계사람들’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를 했다. 참여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족을 향한 강제 수사를 규탄하며 자유롭게 발언하고, 검찰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검찰정사를 향해 ‘시민의 함성’을 지르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검찰 개혁 촛불을 대학생이 이어가겠다’며 오후 6시께 광화문 세월호 광장

국회앞서 사법적폐청산 문화제

공수처 설치 등 법안 통과 촉구

광주서 3번째 검찰개혁 촛불집회

한국당, 광화문서 정부규탄 집회

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검찰 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광주에서도 이날 3번째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인근 도로에서 25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검찰개혁,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광주시민 3차 촛불 대회’를 열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검찰 개혁 이뤄내자’,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등 손팻말을 들고 한목소리로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을 조속히 추진, 성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완수’, ‘정치검찰 해체’, ‘국민의 검찰로’ 등 구호도 외쳤다.

한편, 광화문 일대에서는 조 전 장관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1시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했다. 한국당 측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 개혁, 그중에서도 공수처가 정부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통해 ‘공수처 불가’ 등을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은 비슷한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법 저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광화문으로 행진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갔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대로에서 열린 검찰 규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검찰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장관 유력 전해칠 “역할 피할 수 있겠나”

총선이나 입각이나... 깊어지는 고민

목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면서 그의 정치적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3선 출마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메느냐를 놓고 정치적 고민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선인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르려면 원내대표 및 당 대표 도전 등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전 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3철’의 한 명으로 불리며 여당 내 친문 그룹인 ‘부영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입각을 하면 내년 총선은 불출마로 정리되는 것은 물론, 원내대표 도전은 물론 내년 8월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도 사실상 어렵

게 된다. 특히, 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슈퍼예산안을 지켜내야 한다. 또 광주-전남지역 내년 국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법무부 장관직 제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 개국공신으로 상시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었던 데다, ‘조국 정국’이 초래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전 의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내외에선 전 의원이 아직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의사 타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李 총리·아베 만남... 내달 한일정상회담 가능할까

24일 면담... ‘대화 물꼬’ 기대감

강제징용 등 난제 여전 신중론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20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황 급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내달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에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얼마나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까지 거론할 시점인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며, 그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담아두지 않고 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지난 16일 참의원 예선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전과 비교해

‘유화 제스처’를 보인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대목이다.

내달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런 다자회의에 양 정상 참석할 경우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이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 모두 그 이전에 열리는 다자회담 등을 계기로 해법 모색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재검토하는 대신 일본의 수출규제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할지, 또 아베 총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 면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 혹은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한일 정상 모두 문제해결에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극적으로 11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아직 정상회담을 거론할 단계가 되지는 않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아베 총리가 최근 대화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www.bixpo.kr

**BIXPO 2019**  
Energy Transition & Digital Transformation

2019년 11월 6일(수) ~ 11월 8일(금)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November 6-8, 2019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Korea

<p><b>신기술 전시회</b></p> <p>New Technology Exhibition (299社)</p>	<p><b>국제컨퍼런스</b></p> <p>International Conferences (52세션)</p>	<p><b>국제발명 특허대전</b></p> <p>International Invention Fair (160點)</p>
---	--	--